# 후보들 극단 대치…"이러다 판 깨질라"

## ■'경선 잠정 중단' 위기의 신당

*대통합민주신당의 국민경선이 조직·동원선거에 얼룩지면서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당 지도부가 '경선 일정 잠정 중단'이라는 강경책을 내놓았지만 후보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면서 경선관 자체가 좌초되지 않느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약발 안 먹히는 중재안=당 지도부는 조직·동원선거 논란과 관련, 이틀 동안의 경선 일정을 중단하고 오는 5일부터 경선을 예정대로 실시하자는 봉합책을 제시했다.

이틀 동안 후보자들이 합의를 이뤄 정상적인 경선을 진행하자는 메시지가 깔려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당 지도부의 봉합책은 후보자들의 반발만 부르고 있다. 우선 조직·동원선거 의혹을 받고 있는 정동영 후보 측은 "경선 중단은 쿠데타적 발상"이라며 "경선 불복을 준비하고 있는 이·손 연대는 반민주적 야합이며 5년 전 이인제 후보와 다를 게 없다"고 비판했다.

손학규 후보 측은 "이틀의 일정 취소로 지금까지 제기된 수많은 불법·부정선거의 진상을 낱낱이 밝힐 수 없다"며 반발했으며 이해찬 후보 측도 "연설회는 하지 않고 경선을 하자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제안"이라고 평가절하한 데 이어 정동영 선대위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선판 좌초 가능성은=일단 경선판이 깨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를 반영하듯 세 후보 캠프 모두 "경선을 깨자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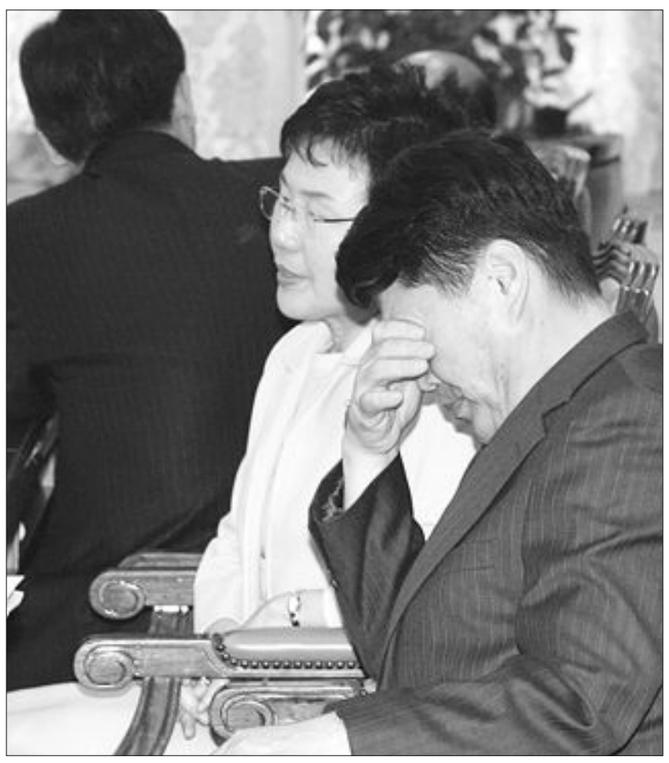
경선이 절반 정도 마무리됐다는 점에서 조직·동원선거를 명분으로 경선판을 깨기는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정 후보에 뒤지고 있는 손·이 후보로서는 '역전 가능성이 보이지 않음에 따라 경선 일정을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도 부담스럽다.

특히, 경선판이 깨진다면 모두 공멸한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서는 세 후보가 조만간 합의점을 도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조직·동원선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데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에서 후보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경선판이 깨지지 않느냐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 세 후보 모두 만족할 묘책 없어 속앓이만

### "하루에 모두 치르자" 원샷 경선론 제기도



조직·동원선거 논란으로 대선 경선을 잠정 중단한 대통합민주신당 양길승 경선위원장 등 지도부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후보 간 합의안 도출=일단 대통합 민주신당 내부에서는 모든 경선을 뒤로 미루고 하루에 남은 경선을 모두 치르자는 '원샷 경선론'이 제기되고 있다.

조직·동원선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는 지역순회 경선을 생략하고 특정일을 지정해 남은 경선을 치르자는 것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경선 시기를 연기해 모바일 투표를 확대하는 안도 나오고 있으며, 인구 비례로 선거인단을 조정하고 비중치를 두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대통합 민주신당 핵심 관계자는 "경선판이 깨진다면 모두 공멸하는 것임을 후보들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합의점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누구 말이 진실? 이-부시 면담 '혼선'

### 美 대사관 "계획 없다"에 李후보측 "변동 없다"

### 강영우 차관보 "한국 정부가 美측에 강력 항의"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회동계획을 둘러싼 논란이 '진실공방'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주 한나라당 대변인이 공식 브리핑을 통해 "면담일정이 잡혔다"고 발표한 데 대해 주한 미대사관이 "계획이 없다"고 부인하고, 이에 대해 당이 다시 "변동이 없다"고 재확인하면서 혼란이 일고 있는 것.

아울러 면담을 주선한 것으로 알려진 백악관 강영우 차관보가 '한국정부 압력설'을 주장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 이번 사태가 양국간 외교 문제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맥스 곽 주한 미대사관 대변인은 2일 "백악관이 부시 대통령과 이 후보간 면담요청을 받았으나 그런 면담은 계획돼 있지 않다"면서 "이는 미국 정부의 공식입장"이라고 밝혔다.

외교 관례상 대사관측이 "공식입장"이라고 밝힌 것은 본국과의 입장조율을 거쳤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번 면담이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박형준 대변인은 "지금까지 달라진 상황은 없다. 두 사람의 면담은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 측근도 "이번 면담은 공식 외교라인을 통해 정해진 것이 아니어서 대사관에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 뒤 "우리 정부와 미국 국무부가 공식 채널을 통하지 않은 데 대해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미대사관의 발표에 '뒷배경'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내비치기도 했다.

면담을 주선한 강영우 차관보도 1일 "한국 정부가 주미 한국대사관과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미국(정부)측에 강력히 항의한 것으로 안다"면서 불쾌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이 후보측이 "부시 대통령과의 면담이 없더라도 방미 일정은 진행된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회동 무산을 전제로 일정을 다시 짜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일각에서는 이번 회동이 미국과 한국정부는 물론 이 후보로서도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어 이런 분석에 무게를 싣고 있다. /연합뉴스

# "대운하? 토목출신 강조하나"

### 한나라 이한구 정책위장 李 주요 공약 비판 '논란'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이 이명박 대선후보가 경선 기간 제시한 주요 공약들을 비판한 것으로 2일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정책위의장은 최근 정책조정위원장들에게 보낸 '이명박 후보 공약에 대한 정책위의장 검토 의견' 제하의 문건에서 이 후보의 대표공약인 한반도대운하 공약과 7.4.7 공약(10년내 연 7% 경제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세계 7대 강국) 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한반도대운하에 대해 "내수시장 살리자고 한반도 대운하 한다? (이 후보가) 토목 출신 강조하려는가? 선진국 타입의 경기회복 정책은 없나?"라고 지적했다. 이는 대운하가 과거의 개발공약 수준이라는 범여권의 비판과 궤를 같이 하는 대목이다.

그는 또 7·4·7 공약에 대해서도 "공약으로서 성립 불가능 → 비전으로 애매하게 처리할 필요"라고 평가하면서 "'대한민국 7·4·7'이 무슨 대표 공약?"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7% 성장 달성방안 부실", "재정소요액 계산 부실, 특히 지방공약 포함하면 계산 안맞음"이란 평가도 곁들였다.

그는 이 후보의 과학기술 관련 공약인 국제과학기업도시의 경우 "국제과학기업도시 건설하면 과학기술 강국 건설?"이라고 지적했고, IT(정보기술) 공약인 'U-코리아'에 대해선 "노무현 정부 정책보다 부실"하다고 평가절하했다. 경선 때 중립을 표방했던 그는 "박근혜 캠프의 좋은 정책은 무엇을 수용했나"라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연합뉴스

# 동원선거 논란…민주당 경선도 '삐걱'

### 조순형 "경선 불참도 고민" 배수진

동원경선 논란의 해법을 둘러싸고 민주당 지도부와 조순형 후보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조 후보측은 전북경선의 후원당원 누락사태와 이인제 후보측의 동원선거 의혹 등과 관련, 전북경선 원천무효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당 지도부는 경선무효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누락된 후원당원의 추가 투표 실시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박상천 대표 등 지도부는 2일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동원경선 논란에 대한 수습책을 논의키로 했으나, 조 후보측의 요구 사항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도부와 조 후보가 동원경선 해법과 관련,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현재 선거운동을 전면 중단한 상태인 조 후보가 경선 중도포기의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조순형 후보측은 동원경선 의혹에 대해서 합리적인 시정조치를 내놓지 않을 경우 심각한 사태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후보는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에 출연, "당이 이인제 후보를 민다고 본다. 중앙당이 선거인단 누락사태, 당대표 특보들의 특정후보 밀기를 방관하고 있다"며 향후 경선불참 여부와 관련, "그것(경선불참)도 고민하고 있다. 확실히 결단은 안내렸지만 여러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盧대통령 명의 도용한 대학생 3명 불구속 입건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돈을 받고 노무현 대통령 등의 명의를 도용해 대통합민주신당 국민경선 선거인단에 허위 등록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박모(19)군 등 대학생 3명을 2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8월23일 오후 5시께부터 8시30분께까지 서울 숭인동의 한 PC방에서 신당 국민경선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 노 대통령 등 열린우리당 당원명부에 적힌 사람들의 명의와 개인정보를 도용해 선거인단에 등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 한, 정치관계법 27건 단독상정 강행

### 국회 정치특위 또 파행

국회 정치관계법특위가 파행 운영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2일 특위 전체회의를 단독 소집해 소위 심의를 마친 법안들을 직권상정하며 대통합민주신당을 압박했다.

한나라당 소속인 이상배 특위 위원장은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각 소위에서 합의한 법안 27건의 직권상정을 강행했다.

이들 법안 중에는 신당이 합의 과정 의사를 밝힌 ▲여론조사 1~2위 대선후보 사망시 대선 연기 ▲개표시 기계 및 전산장치 보조적 활용 ▲정치후원금 공개기준 상향조정 ▲국고보조금 인상률 물가연동 등의 내용을 담은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도 포함돼있다.

그러나 위원 수 증원을 요구하고 있는 신당 의원들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들까지 전원 불참해 의결정족수가 부족함에 따라 더 이상 회의는 진행되지 못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회의에서 특위 운영에 불참하고 있는 신당 측을 맹비난했다. 배일도 의원은 신당 의원들의 불참 행위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국회의장에게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